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강순원*

평화구축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존 폴 레더라크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이론 평화구축 사례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책을 김동진 박사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후마니타스, 2012년 출간)는 평화교육자들에게도 갈등에 대면하는 평화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평화교육이란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광의의 갈등해결과정에 개입하는 구조적 문제해결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세계적인 분쟁지역에 직접 개입하



* 한신대학교 교수

여 이론 평화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천적인 이론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한반도갈등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하겠다.

이 책은 1994년 유엔대학교의 ‘갈등과 거버넌스’ 학술 시리즈 가운데 한 권으로 출간된 것을 다시 1997년 미국평화연구소에서 보완 개정해 출판한 평화구축 분야의 대표적 고전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평화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평화구축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아프리카 작은 국가의 분쟁조차도 국제화된 분쟁의 소재가 지역화한 부족간의 내전으로 비화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 평화 구축이 고위층 외교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통전적인 프로세스임을 알게되기를 희망한다.

평화구축(peace building)이라는 용어는, 1992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가 “평화를 위한 의제”(1992)에서 평화조성 혹은 평화만들기(peace making) 및 평화유지(peave keeping) 개념과 대비시켜 제안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부르토스 갈리에 의하면, 평화조성 활동은 주로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큰 분쟁 지역에서 휴전 또는 평화조약을 맺어 갈등 집단들 간의 폭력 행위를 그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평화유지는 이렇게 폭력이 멈추어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이에 반해 평화구축은 유엔의 활동을 통해 평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폭력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평화조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 및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부르토스 갈리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평화구축 개념은 그간 국제사회가 세계 여러 갈등 지역에 개입하면서도 평화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

고 있다는 반성에서 기인한다. 파란 헬멧을 쓴 유엔평화유지군이나 연합군 등의 형태로 개입한 국제사회가 갈등 집단 간의 직접적인 폭력을 멈추어 휴전이나 평화조약을 맺게 하더라도, 그런 폭력이 발생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자신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오히려 이들의 개입이 폭력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기도 했다. 그 결과 갈등 지역에는 이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유혈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켜보던 평화연구자들은 1970년대부터 폭력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내포한 평화구축 개념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조약 혹은 합의의 순간까지는 ‘과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구조’ 또는 평화 체제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위층의 협상을 통해 휴전이나 평화조약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갈등 지역 모든 사람의 화해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조약 이전에도, 그리고 평화조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의 일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레더라크가 말하는 평화구축은 과정 혹은 구조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한다. 평화구축은 조약 혹은 합의라는 시점 혹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과정으로서 구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의 지속가능성은 조약이나 합의와 같은 목적을 전제로 한 과정이나 달성된 목적을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구조에 달

려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구조를 통해 비로소 평화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협약과제에 대한 이행의 기능을 넘어 실제 삶의 필요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은 곧 평화교육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평화교육은 폭력을 잉태한 사회악에 대한 인식과정을 통해 그러한 폭력구조를 불식하고 새로운 평화구조가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갈등이전(pre-conflict)과 갈등해결과정(Conflict in process) 갈등 후(post-conflict) 상황이 지속가능한 구조 속에서 온전한 평화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치교육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평화구축에 관여하는 고위급 지도자층 및 중간 지도자층 그리고 풀뿌리 지도자들을 망라하는 관련인사들에 대한 사전, 사후교육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갈등전환교육이 모두 평화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포함한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과제이고 전 사회적 교육이다.

특히 적대화된 이미지(imagery enemy)를 안고 살아가는 분단사회에서는 적대자상을 해체하는 평화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레더라크의 말처럼 “적이라는 이미지를 유지시키는 뿌리 깊고 장기적인 공포”가 존재하고 “자신의 입지 및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지도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회에서는, 적대화된 이미지에 갇혀 생활할 수밖에 없는 대중들을 의식화하는 평화교육은 결코 쉽게 시도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결국 비인격화하고 비인간화하는 분단체제는 특정 지위집단의 체제안보 위협 속

에서 적대화된 이미지를 실제 적으로 수용하는 생존논리를 체득하게 된다. 그 결과 두려움을 느껴 “분명하게 정의되고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적, 그리고 집단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은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다”고 레더라크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을 다루는 평화교육은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류의 진보이고 소망이지 않은가?

레더라크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자신의 평화교육 모형이 한반도 갈등상황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하며 세가지 전제를 제언한다. “먼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정부의 고위급 공직자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상호의존적 작업이어야 한다. 둘째, 갈등과 폭력이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어 온 만큼이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작업이다...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된 관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궁극적으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교육의 몫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은 오랜 분단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문제의 복잡성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신념이다.”라는 말은, 비록 평화구축 모델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

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공통적인 전제이다. 평화교육자에게 갈등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인식 위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긍정적인 문제해결력은 소중한 자세이다.